

# 충북 경제특별도의 목표와 과제

황 신 모

청주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

## I. 들어가는 말

세계는 WTO/FTA체제가 본격화되면서 국경없는 경제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한 각 국가에서는 스스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경제블록간 통합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현재 국가별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FTA는 무역자유화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경제자유화의 확산에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국민경제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지역경쟁력이 취약한 충북경제는 이러한 커다란 경제흐름에 대하여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더욱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게 될 것이다.

세계화·지방화시대에 지역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있어서 국내외 다른 지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은 다른 국가나 국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고, 자본·노동·기술·지식 등 생산요소도 이동하여 그 지역은 낙후를 면할 수 없다. 충북은 다른 지역에 비해 기업하기 좋은 경제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기업활동에 대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어 주요 기업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최근에 들어서면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는 것은 결국 그 지역민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을 주도하는 리더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리더십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게 되었다.

충북은 민선 4기 도정출범과 함께 기업하기 좋은 여건 조성에 좋은 기회를 맞고 있다. 민선 4기 충북은 '경제특별도 건설'에 도정목표를 두고 도민에게 1인당 지역총소득 3만불시대를 약속하며 '경제하려는 의지'를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만들어 국내외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미래 발전잠재력을 제고하여 충북의 경쟁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높인다는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과연 이들 목표가 실현가능할 것인가는 충북도민들의 '경제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충북을 경제특별도로 조성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결국 충북도민들의 몫이다. 그동안 말로만 외치던 구호로서는 실현불가능한 것이다. 경제특별도 건설은 민선 4기 도지사의 정책목표로 출발했기 때문에 충북의 공무원조직 전체가 경제특별도 건설의 전사가 되어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먼저 광역자치단체장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기초자치단체장들이 한 마음이 되어 경제특별도 건설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리고 경제단체, 언론계, 학계, 금융계, 시민사회단체 등 충북도민 모두가 경제특별도 건설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 기업인 스스로와 이와 연계되어있는 경제단체의 혁신 의지와 이에 대한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천명해 둔다.

## II. 공공부문의 새로운 패러다임 모색

최근 지식이 주도하는 지식산업시대에 접어들면서 기업간 산업간 생존을 건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흐름은 민간부문에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공공부문에도 확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국가 등 공공부문에서도 치열한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경쟁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상대가 존재한다. 완전자유경쟁을 전제한다면 상대보다 어떤 요인에 있어서든 경쟁우위를 확보하지 않으면 존재자체가 소멸되어야 하는 냉엄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전제군주시대, 전체주의시대, 독재시대 등 비민주주의 시대의 공공부문에서는 경쟁의 원리가 무시되고, 오직 지도자나 지배그룹의 의지에 의해 경제가 운용되었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경쟁의 원리는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민간부문에서는 물론 공공부문에서도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이념이 되고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예외는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도 민간부문에서와 같이 경쟁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도도한 시대의 흐름에 휩싸여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가 보장되는 21세기를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첫째, 미시적으로 접근할 경우, 대부분의 공공부문에서 경제논리에 의한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공공부문에서 완전자유경쟁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공공부문에는 경쟁의 원리에 의한 시장 메커니즘이 적용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 그것은 공공재나 외부경제가 작용하는 재화에는 경쟁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문에는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

다하더라도 우리는 국방, 치안, 소방, 교육, 복지, 외부경제, 공정거래 등의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공공부문에서 경쟁의 원리가 적용되는 도도한 시대적 흐름 하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택하는 주민직선제를 시행하면서 지방정부간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지역경쟁력 제고가 자신의 평가와 재선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공약이 최우선순위를 점하고 있다.

최근 충북의 입장에서 볼 때, 경제양극화 현상, 인구의 정체 현상, 기업인의 기업활동 의욕 저하, 지역경쟁력의 정체 현상, 지역 불균형 문제 등 충북지역경제 전반이 부진해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설상가상으로 비정규직문제, 청년실업문제, 가계부채문제, 교육비가중부담문제 등 어려운 경제현실에서 볼 때,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충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있는 '경제특별도 건설'은 도민들의 가슴에 그대로 각인되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국내외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대형 건설프로젝트를 개발, 고용을 창출하여 경제활력을 강화하며, 활력있고 희망찬 농업·농촌을 만든다. 권역별 특화전략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있는 경제특별도 건설은 대부분의 도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고 있는 것이다.

경제특별도 충북 건설을 위해서는 그동안 적용되어 왔던 공공부문의 기본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한 일부분만 제외하고 모든 부분에서 경제원리에 의한 경쟁체제로 전환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다.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를 실천할 공무원 조직의 구조와 기능 조정이 필수적이다. 그 다음 이를 뒷받침할 우수한 연구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또한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열정과 능력을 겸비한 유능한 감독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책 결과를 평가하고 환류시키는 평가시스템과 인센티브시스템의 구축이다.

둘째, 거시적으로 접근할 경우, 개별 지역경제의 불균형 내지 양극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국가의 기본정책으로 시행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경쟁의 원리에 의한 경제운영은 각 지역경제간 불균형을 발생시키고, 이것이 지속되면 양극화 현상은 심화된다. 경쟁력이 낮은 지역은 낙후되고, 경쟁력이 높은 지역은 경제력 집중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에 따라 정치 사회적 불안정이 전개되고, 이것은 다시 경제불안정으로 이어져 결국은 모든 지역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게 만든다.

〈그림 1〉 21세기 공공부문의 새로운 패러다임



경제특별도 건설에 있어 넘어할 산이 많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수도권 기업의 충북 이전, 첨단기업의 창업, 외국인 기업의 유치 등에 있어서 다른 지역과 비교,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수도권과는 심각한 상충 관계에 직면해 있다. 수도권에서는 대수도론을 내세워 수도권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로 만들어야만 국가경쟁력이 높아져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의 구시대적 산물인 수도권 규제는 완화 내지 철폐되어야 하는 것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충북을 비롯한 비수도권에서는 정치·경제·금융, 무역·인구, 문화 예술·교육·보건의료 등 모든 부분이 수도권에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공해문제, 교통문제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살기 위해서는 지방분산·지방분권 정책을 실시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룩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충북은 비수도권지역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수도권의 대수도론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또한 충북을 공간적으로 중부권, 남부권, 북부권으로 구분할 경우, 남부권은 대전에 생활권이 분산되고, 북부권은 강원도와 경기도에 생활권이 분산되어 충북 전체적으로 결집력이 떨어진다. 앞으로 충북지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충북지역의 지역별 균형발전정책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앞에서 논의한 논제는 경제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 경쟁이나 형평이냐의 두 가지 상충되는 이념이다. 경쟁은 효율성을 높이지만 불균형을 초래하고, 형평은 균형상태는 높일 수 있지만 효율성을 저하시켜 경쟁

력을 하락시킨다. 따라서 이 두 이념을 어떤 방법으로 조화시키어 최적상태로 만들어야 하느냐가 중요한 과제인 것이다.

### Ⅲ. 경제특별도의 목표

#### 가. 경제특별도 건설의 필요성

최근 대내외 경제흐름은 국경없는 경제전쟁이 심화되고, 지방자치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됨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각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윤창출의 극대화가 목표이므로 그들에게 유리한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고, 이에 따라 생산요소, 즉 자본, 노동, 기술, 지식이 집중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1세기 들어오면서 IT산업이 산업전반을 주도하면서 고용없는 성장이 세계적 트렌드가 되고 있다. 그동안의 경제성장을 중화학공업 중심의 자본집약적 산업이 주도했다면, 21세기에는 IT, BT중심의 첨단기술 산업과 웰빙산업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첨단기술의 IT산업은 전후방산업연관효과가 크게 작용하게 되어 모든 산업부분에서 IT부품 및 기술의 융합이 급속히 확산될 전망이다. 이에 부가하여 노동조합의 강력한 투쟁은 산업현장의 자동화를 급속히 전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래의 경제성장은 노동의 고용은 최대한 축소하고 자동화가 심화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 고용창출은 최대의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는 그동안의 9%대의 고도성장에서 최근 4%대의 저성장으로 급속히 진행하고 있고, 최근 들어 성장잠재력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에 있다. 특히 충북은 지역총생산 성장률이 낮은 수준이고, 인구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구조와 기업입지 여건도 취약한 상태에 있어 도내 대기업이 타지역으로 이전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충북지역경제 여건에서 경제문제를 제1과제를 제기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은 충북도민들의 머릿속에 뜨거운 반향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충북을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건설하여 국내외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여 충북도민의 소득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 경제특별도 건설인 것이다.

〈그림 2〉 충북 경제특별도 건설의 필요성



우리나라 경제는 그동안의 고도성장기를 지나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에 따른 새로운 패러다임의 도출과 R&D 인프라의 부족으로 성장기반이 약화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급속히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우선 규모의 경제에서 뒤지고 있고, 취약한 산업기반을 가지고 있는 충북의 지역경제성장률도 둔화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동안 충북의 인구는 미미한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고, 고령화의 급진전으로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청년실업이 증가하여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아지고 있고, 지역건설업의 기반 열위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도내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인력공급, 기술협력, 지식정보공급 등에서 경쟁 타지역에 비해 열악한 상태에 있다. 전국에 비하여 경제력과 인구비중도 낮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충북은 중부권에 비해 북부권과 남부권의 발전속도가 느리게 진행되어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충북도민의 경제마인드를 제고하고, 경제하려는 의지를 확산시켜 그동안 모든 분야에서 진행됐던 낭비적인 요인을 제거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가계부채가 증가되고 있고 청년실업률이 높아 경제생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업하기 좋은 충북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첨단기업을 유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도민소득을 증대시켜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경제특별도 건설의 필요성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시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 나. 경제특별도의 목표

### 1.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경제특별도 건설

지식산업시대에 접어들면서 세계는 국경없는 경제전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하기 좋은 입지조건을 창출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및 지역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건설하여 국내외 환경친화적 첨단기술기업의 유치에 모든 국가 및 지역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 아날 수 없다. 따라서 충북을 세계적 경쟁력이 높은 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과학적인 분석과 이의 추진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요인을 중시,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 1) 경영환경

- 도민 의식의 세계화
- 건강한 노사관계 정립
- 산업단지의 세계적 경쟁력 구축
- 산업단지 외국기업 입지여건 제고와 조세부담 완화
- 물류유통시스템 구축
- 금융 및 행정 지원 서비스 강화

#### 2) 생활환경

- 교통환경
- 교육 문화 환경
- 주거환경
- 보건의료서비스
- 비자 출입국 서비스
- 레저·여가·음식·쇼핑 환경

### 2. 경제특별도의 정책목표

경제특별도란 충북도민의 경제마인드를 구축하고 경제하려는 의지를 확산, 모든 경제주체의 경제활동 제반여건을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여 기업인이 최적 환경에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고용증대효과, 기술증대효과를 최대한 높이고, 지역총생산을 증대하여 도민소득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일 수 있도록 조성하는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다.



1) 추상적 목표

- 도민의 경제마인드 구축
- 경제주체의 경제하려는 의지 확산
- 기업인 예우
- 산업인프라 구축
- 환경친화적 첨단기술의 국내외 기업유치
- 각 산업단지별, 농업단지별 특화 구축
- 각 산업단지별 주력기업 선정 및 유치
- 지가 및 노사관계 안정

2) 구체적 목표

- 충북지역경제 비중 4%대 달성의 기반 조성
- 1인당 지역총소득 3만불 수준
- 남부권, 북부권 지역의 특화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스템 구축
- 건설업 및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 지속적 추진
- 농업·농촌 발전 전략수립 및 농민소득 증대
- 문화예술기반, 교육환경, 사회적 배려자 고용환경 등 지속적 개선



## IV. 경제특별도의 기본모형과 과제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에 있어서 요구되는 주요한 변수를 분석, 종합하여 기본모형과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대 영역 16대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황신모 외, 충북 경제특별도 건설의 기본체계 (2006), 충북경제포럼, 충북개발연구원, 참조)

### 가. 기업(인) 예우측면(4대 과제)

-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업인과의 정기간담회
- 기업 유치·설립·활동·사후지원관리의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산학연관 클러스터 지원체제 구축
- 충북도민의 기업사랑운동 전개

#### 나. 산업(기업) 경쟁력 측면(4대 과제)

- 산업단지 세계적 경쟁력 구축
- 각 산업단지별 특화산업과 주력기업 선정 및 유치
- 기업,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지방자치단체간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 대덕 R&D특구의 오송·오창 산업단지로 확대 및 테크노 마트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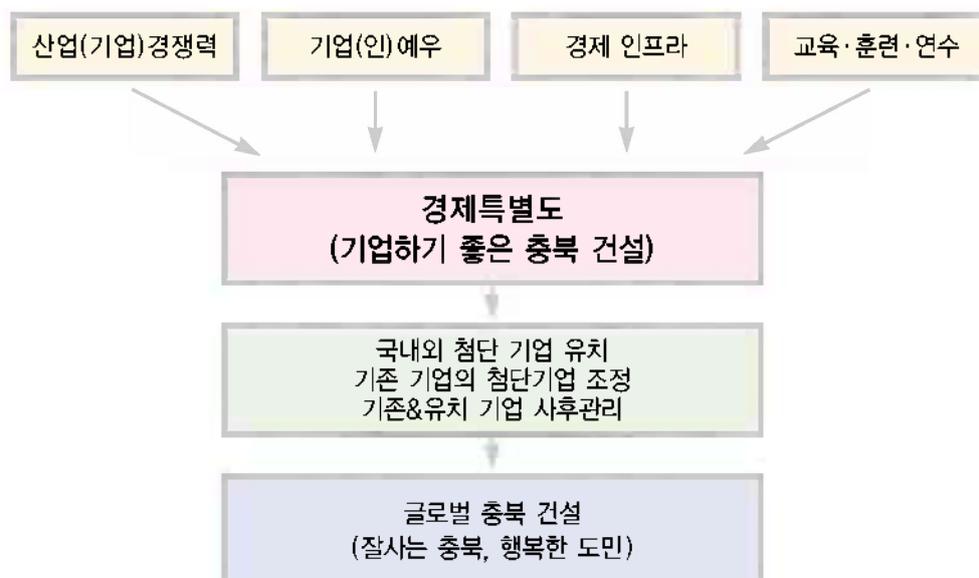
#### 다. 경제 인프라 측면(5대 과제)

- 공공부문의 경제마인드 구축과 경쟁원리 도입
- 고속도로, 청주국제공항, 고속철도, 산업도로망의 종합교통시스템구축과 통신망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공업용수공급, 전력공급, 노동시장 유연성, 지기안정 등 확립
- 노사평화 구축
- 문화, 예술, 관광 인프라 구축

#### 라. 교육 훈련 연수 측면(3대 과제)

- 지방자치단체장과 관련 경제단체장의 세계적 리더십 확보
- 공무원과 경제단체 직원의 경제마인드와 세계화 교육 훈련 연수
- 교육 훈련 연수 결과에 대한 환류 및 인센티브 시스템 도입

〈그림 3〉 경제특별도 건설의 기본모형



## V. 맺는 말

충북 경제특별도 건설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제단체장의 원활한 협력체제구축과 강력한 리더십이 요구된다. 경제특별도는 이를 주도해야 하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각 경제단체에서 스스로 그동안의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조직과 관행의 혁신을 이룩하고, 모든 부분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구축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작업인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이 있어야만 가능한 작업이다.

경제특별도를 주도해나가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단체이다. 이 두 주체가 리더십을 갖기 위해서는 스스로 혁신하고 글로벌화되지 않으면 다른 어느 주체도 리드해 나갈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과 경제단체장의 혁신마인드 정립과 글로벌화 실천 능력은 경제특별도 건설의 가장 중요한 요건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제특별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리더십과 일관된 정책의 실천이 요구된다. 지방자치단체와 경제단체는 기업인의 기업을 정진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대내외 여건 조성과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지속적인 조직 구조조정과 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은 기업활동의 간섭자가 아닌 최소한의 규칙제정자 역할에 머물러야 하고, 기업어로사항이나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반 정책추진에 있어서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지원자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끝으로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창의적 인재 육성, 지역시장 확대, 테크노마트 조성, 지식인프라 구축,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등 인프라를 확충 내지 구축하여 기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산업단지내 첨단기업의 유치, 조정, 사후관리를 통해 기업간 연관효과를 제고하고 융합기술을 개발하여 미래의 치열한 생존경쟁을 극복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을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